

비트코인 7만5000달러 회복… 중동사태 불확실성은 여전

비트코인 주간가격 5.48% 올라
이더리움 5.73% ↑, 리플 7.51% ↑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 2.6억달러
소규모 공습·해협 재봉쇄 등 압박
상황 변화 유의… 취약성 노출 상태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17일 이란과 레바논(헤즈볼라)의 일시 휴전 합의 이후 '중동사태'의 종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에서다. 휴전 이후에도 양국 간에 충돌이 지속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위험자산 성향이 짙은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은 종전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시장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께 1BTC당 7만 5542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2월 3일 이후 2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전일과 비교해 1.9% 하락했지만, 주간 가격으로는 5.48%의 상승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주민들이 실탄과 불꽃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축하하는 가운데, 예광탄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

가격도 올랐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ETH)은 지난 한주간 5.73% 올랐고, 시총 3위 리플(XRP)은 7.51% 상승했다. 4위 바이낸스(BNB)와 5위 솔라나(SOL)는 각각 4.69%, 3.95% 올랐다. 이달 초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협상 당시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가격이 올랐지만, 지난 주에는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이 상승했다.

시가총액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 18일 기준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조 6100억달러로, 지난 2월 3일 이후 최대치다. 2월 초 스톡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정부 주도의 가상자산 매입 중단' 발언 이후 하락폭을 대부분 회복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0일 간의 휴전에 동의하면서 '중동사태'에 출구전략이 제시

되고 있어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레바논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7일 오전 6시부터 10일간 공식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인 AP통신은 "이번 휴전은 이스라엘-레바논 대사들의 회담 및 트럼프 대통령·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통화 끝에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동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레바논 남부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지속했다. 이슬람 시아파에 속하는 헤즈볼라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친밀한 관계로, 이란은 중동 사태 종전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헤즈볼라 공격 중단을 요구해왔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50을 기준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투자 과열)는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57을 기록해 '중립' 수준을 나타냈다. 이달 초에는 28까지 내려 '공포' 수준에 머물렀던 만큼, 투자 심리에 '중

전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에도 남부 레바논에 '옐로 라인'을 설정하고 소규모 공습을 지속하고 있으며, 헤즈볼라 또한 "정전 위반이 계속된다면 전투원들이 보복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도 오는 20일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자산 가격이 종전 기대감을 반영한 만큼 상황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소의 데시슬라바 이아네바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에 있어) 7만5000달러는 투자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올 수 있는 가격"이라면서 "비트코인이 7만5000달러를 넘으면 더 많은 구매자를 끌어들이겠지만, 이는 전적으로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려있다. 랠리는 여전히 취약성에 노출돼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6·3 지선 앞두고 '국책은행 3곳 지방이전' 논의 재점화

지선 전까지 대상 기관 확정 후
일부기관 우선 이전 가능성 제기
금융 수요 수도권 집중… 실효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국책은행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선 공약으로 장기간 제시돼 온 만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도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이전 당시 적

용된 예외 기준을 재검토해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까지 대상 기관을 확정된 뒤, 일부 기관을 우선 이전하는 '단계적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먼저 논의되면서 수출입은행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던 전례가 반영된 관측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른바 '선(先) 산은-후(後) 수은'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느 기관이 먼저 이전 대상이 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기업은행은 전국 지점망을 갖춘 시중은행형 구조라는 점에서 본점의 서울 잔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있다. 반면 이미 영업망이 분산된 상황에서 본점 이전이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본점의 상징성'과 '실질 기능'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지점 기반 영업 구조라 이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산은과 수은을 비교하면 정책금융 기능 측면에서 산은이 상대적으로 분산돼 있어 수은보다 먼저 이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심을 겨냥한 공약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정책금융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

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특히 기업은행은 과거부터 대구 이전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번에도 정치권 공약과 맞물리며 이슈가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정치 논리에 따라 기관을 나눠 이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입금 수준이 업권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지방이전까지 겹치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특히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신규 청사 대신 기존 건물 활용을 지시하며 신속하게 이전을 밀

어붙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 이전 역시 구체적인 확정될 경우 단기간 내 실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다.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모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모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담은 법안은 2024년 6월 발의 이후 진전이 없고, 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담은 개정안 역시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경우 지역균형발전보다는 표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metro

"이젠 AI가 해킹"… 정부, '미토스 쇼크' 대응체계 가동

과기부, 40개사와 CISO 간담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보안특위 회의

앤스로픽의 차세대 인공지능(AI) '클로드 미토스(Mythos)'가 자율적 해킹 능력을 입증하며 보안 패러다임을 뒤엎는 등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와 주요 플랫폼·보안 기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들과 연쇄 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 논의에 착수했으며, 국가 차원의 보안 정책 재정비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3사와 플랫폼사, 정보보호 기업, 주요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을 잇달아 만나 '클로드 미토스'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미토스는 앤스로픽의 차세대 AI로 27



한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는 앤스로픽 웹사이트 페이지와 회사 로고. /AP·뉴스시스

년간 숨겨져 있던 오픈BSD의 버그를 단숨에 식별하고, 스스로 격리 환경을 탈출해 공격 흔적을 지우는 등 고도의 자율적 해킹 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간의 개입 없이 명령 한 줄만으로 취약점 분석부터 공격 코드 생성까지 전 과정을 완수해 보안 위협을 현실화했다는 평가다. 앤스로픽은 이 같은 위협성을 고려해 모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미토스를 선두로 AI 해킹에 대한 위협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과기부는 지난 15일 국내 주요 정보보호 기업 간담회와 주요 기업 40개사 CISO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통신3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사 CISO, AI 보안 전문가들과 릴레이 현안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국가 차원의 논의도 시작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16일 보안특위 1차 정례회의를 열고 '앤스로픽 클라우드 미토스' 동향과 금융 분야 설치형 보안 소프트웨어의 단계적 철폐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위원회는 최근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고도화가 사이버보안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원태 보안특위 위원장은 "이제 사람

이 아닌 AI가 새로운 해킹의 주도권을 가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존 우리가 가진 모든 보안 정책을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보안이 AI 대전환과 AI강국 도약의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보안 업계 관계자들은 '미토스 쇼크' 이전에 이미 AI 발전에 발맞춘 AI 해킹이 실제 위협으로 도래하지 오래라고 설명한다.

AI 해킹은 기존 해킹과 달리 공격의 속도와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AI 기반 해킹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취약점을 자동 탐지하고 공격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은 대상에 대한 동시 공격이 가능해졌다.

오픈시브 사이버보안 기업 티오리 또한 백서를 통해 현재 대중적으로 공개된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피스 4.6과 오픈AI의 GPT 5.4 등 모델을 결합해 미토스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모두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티오리는 "AI가 능동적인 해킹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면서 "미토스급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AI 모델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해당 기술이 방어자뿐 아니라 공격자에게도 동일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해킹은 빠르게 위협성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보안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280개 이상의 공격 조직을 분석한 '2026 글로벌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사이버 범죄 평균 침입 시간은 29분으로 단축됐다. 가장 빠른 공격은 27초 만에 이뤄졌다. AI 기반 공격 활동은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

클라우드스트라이크 측은 "침입은 이제 신뢰된 계정, SaaS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이뤄지며 정상 활동처럼 위장된다"며 "보안 대응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